

〈제 705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광주 고려인마을에 후원금 1천만원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에 위치한 고려인마을 방문해 1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식에는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고려인 아동지원 및 의료비, 난민 정착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 지원 사업' 실시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 지난 17일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를 대상으로 진로적성검사, 진로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금호타이어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발한 50명의 초·중학생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들은 진로적성검사를 통해 목표, 성취 등의 항목에 대한 역량 측정을 받고 전문 상담가가 제공하는 진로 컨설팅을 받게 된다. 또 과목별 EBS 교재와 온라인 멘토링 및 교육 콘텐츠도 제공 받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는 현재의 방향성을 토대로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정 열 총무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기아자동차

◆ 2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기아차 노사가 2년 연속 무분규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다. 지난 18일 전체 조합원 2만8천229명 중 2만6천490명이 투표에 참여, 65.7%(1만7천409명)의 찬성률로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노사는 지난 9월 기본급 9만8천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금 200%+4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등을 담은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합의

했으나, 노조 투표에서 임협안만 통과되고 단협안은 부결돼 양측이 재협상을 벌였다.

이번에 통과된 2차 합의안에는 2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 부여하던 평생 신차 할인 혜택 대신 ▲차량 구입 시 할인 연령 75세로 제한 ▲혜택 제공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할인율은 30%에서 25%로 하향한 내용 등이 담겼으며 2025년부터 전기차 구매 시 할인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전기차 혜택 관련 세부 사항은 고객 대기 수요와 보조금 지급 추이, 물량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협의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삼성전자

◆ ‘비스포크 홈 메타’서비스 본격화



삼성전자가 가상현실(VR) 집과 비스포크 생활 가전을 이용해 인테리어를 꾸며보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홈메타는 메타버스 기반 3차원(3D) 리테일 체험 서비스로, 오늘의집이 제공하는 플랫폼에 있는 3차원 주택에 삼성전자 가전을 원하는 곳에 배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나만의 맞춤 인테리어를 지향하는 소비자가 비스포크 홈메타 서비스로 삼성 비스포크 가전 제품의 색다른 매력을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의집과 협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간 제약 없이 소비자가 내 집과 같은 체험 환경에서 더 생동감 있게 삼성 가전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홈메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성정공

◆ 'K-스마트등대공장' 선정



우성정공(회장 박화석)이 최고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K-스마트등대공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글로벌 등대공장'을 벤치마킹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국내 제조업의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고 동종 업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모델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조선내화를 비롯한 10개 기업을 선정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11개사를 선정했으며, 하반기 우성정공을 비롯한 4개사를 추가로 선정, 오는 2025년까지 100개사(누적)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K-스마트등대공장으로 선정된 우성정공은 금형 불모지인 광주지역에 1993년 금형 전문제조회사를 설립하고 지역 내 금형산업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현재는 자동차 및 가전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금형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우성정공은 이중사출 금형 분야에서는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스마트등대공장 선정을 계기로 빅데이터 수집·축적을 통해 지능화 기반의 사출금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제4회 하남혁신포럼 성료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사장 박성수)은 지난 18일 하남혁신지원센터에서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과 함께 '고령사회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2022년 제4회 하남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제4회 포럼에서는 조용준 명예교수가 기조 발표를 통해 거주 공생, 지역공생의 공동체

주거문화, 축소 지향형의 도시구조 개편 및 도심 기능 강화, 광주시 도시계획 등을 설명했다.

'하남혁신포럼'은 광주광역시 관내 산업단지의 동향 및 혁신 경영 사례, 미래 전망과 발전 방안 등을 기조 강연을 통해 조망해 보고 관내 중소기업 종사자들과 네트워킹하는 포럼으로, 하남산업단지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하남혁신지원센터에서 주최하며, 하남혁신지원센터는 광주경진원이 위탁 운영 중이다.

광주신용보증재단

◆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귀남씨 내정



광주신용보증재단 제10대 이사장 최종 후보자로 김귀남 前.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장이 결정됐다.

광주시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형 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 심사 등 공모를 거쳐 추천한 2명 가운데 김 전 본부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김 전 본부장은 1982년 농협에 입사해 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장, 농협중앙회 자회사 감사실장 등을 지낸 금융전문가로 평가받았다.

김 전 본부장은 오는 24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기 3년의 이사장에 임명된다.

광주테크노파크

◆ 에너지신산업 기업 해외진출 발판 마련



광주테크노파크는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혁신 생태계 에너지신산업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제1회 KOREA-LAOS Energy Week'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2022 KOREA-LAOS Energy Week는 광주·전남 에너지신산업 기업들의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한국전력공사, 전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주)이엘티(대표 양희원) △(주)그리다에너지(대표 전석) △(주)원광전력(대표 전연수) △TY파우들리(주)(대표 설세혁) △(주)유에너지(대표 최태원) △(주)씨엔에이에너지(대표 한병헌) △삼성EVC(대표 최성용) 등 광주·전남지역 총 7개사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에너지신산업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알리기 위한 수출상담회와 기업설명회 등이 진행됐다.

특히 수출상담회에는 라오스 현지 관급규모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기업 EDL(라오스 국영 전력청), EDL-GEN Solar, ASEAN GROUP 등이 참여해 국내기업과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으며, 향후 수출 및 공적개발원조 사업 연계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제1575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강영현(유진투자증권 이사) 주제: 리세션 기간의 평정심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10월21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강영현 유진투자증권 이사를 초청「Recession 기간의 평정심」이란 주제로 제1575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영국의 스파이들이 독일의 작전 계획도를 가져와 영국에 뿌렸다. 그럼에도 영국 시민들은 ‘끄덕없어’ 하면서 안이하게 받아들였다. 이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작전 계획도가 드러나고 있다.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따른 판단을 투자자들이 해야 할 시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수그러들면, 금리 인상이 멈추고 주가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까. 강 이사는 선부른 ‘희망회로’를 경계했다. 이미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읽혀지는 국채 장·단기 금리는 역전됐다. 금리 차스프레드는 IT 버블이 붕괴됐던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미 연준이 긴축을 시작하면 그 끝엔 언제나 리세션이 있었다. “내년에 전 세계적인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95% 이상”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준의 정책 변경의 핵심 지표는 고용이다. 현재는 실업률이 3.6%로 견조하다. 예상보다 더 길고 질긴 긴축을 견뎌야 할 수 있다.

2022년 상반기는 ‘역(逆)금융장세’로 봤다.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주가 수준이 일제히 내려가는 시장이다. 우량주·비(非)우량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 반면 하반기는 기업실적 하락으로 증시가 빠지는 ‘역실적장세’로 본다. 업종이나 종목 선택에서 실패 확률이 더 높아지는 무서운 시장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질적 침체는 4분기부터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리세션 판정은 내년 6월 이후로 예상한다. 리세션을 판정하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판정이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리세션은 통상 3~4분기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다가올 리세션을 대비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강조하는 생존전략 1순위는 ‘현금’ 확보다. 현금 비중을 높이고 빚을 갚은 뒤, 앞으로 들이닥칠 지구(持久)전에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분명한 건 전 세계적인 리세션이 오면 지금 자산 가격도 싸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연준이 돈을 조이지 못하고 ‘리세션이다’라는 판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식을 사면 실패하지 않는다. 또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건(현재 19만3000건)에 이를 때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때가 주가 바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II. 광주경충 소식

〈달빛동맹 영호남 노사 한마음 대회〉



본회 운영현 상임부회장은 지난 18일 대구에서 개최한 달빛동맹 영호남 노사 한마음 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광주 노사정이 참석한 가운데 각 노사정 대표의 축하 인사말씀과 함께 공동선언문 채택 및 퍼포먼스를 통해 영호남 노사상생협력의 화합과 신뢰를 다지고 양 지역의 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자고 결의했다.

〈전남대 고용노사관계전문가과정 강연〉



본회 운영현 상임부회장은 지난 19일 전남대학교 경영연구소 고용노사관계전문가과정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서 운영현 부회장은 광주경충 소개를 시작으로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언과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전남대 경영연구소 고용노사관계전문가과정은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노사 분야 전문가 그리고 고용·노사 행정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며, 노사 및 경영관계 전반에 대한 강의와 발표, 토론 그리고 국내 및 해외연수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사무국 일지(10.17 ~ 10.21)

10.17 (월)	● 산업안전공단 재정지원사업 서면심사	10.20 (목)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오찬 간담 ● 전국경충협의회 회의(~21)
10.18 (화)	● 광주지역 혁신사업 발굴 회의 ● 달빛동맹 영호남 노사 한마음 대회	10.21 (금)	● 제1575회 금요조찬포럼
10.19 (수)	● 전남대 고용노사관계전문가과정 강연		

1. 노사 동향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노동시장 개혁 방안 논의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10. 17 기자 브리핑을 통해 그간 진행해온 현장소통 결과, 주요 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
 -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주52시간제 틀 내에서 개별 노사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장근로 단위 다원화, ▲유연근로제 활용 제고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공정한 평가·보상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설치 규정상 활동 기간은 11. 17까지로 규정돼 있으나, 연장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
 - ※ 연구회 설치 규정상 2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정부, 조선업 상생협력 방안 모색

- 정부는 10. 19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발표
 - 정부는 조선업의 문제점으로 ▲하청 근로자의 취약계층화, ▲처우 악화와 인력난 심화, ▲원하청 노사 협력 부재로 인한 현장 갈등 등을 지적
 -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방안으로 ① 원·하청 자율적 구조개선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추진, ② ‘인력유입-재직유인-숙련형성’ 체계 구축을 통한 인력난 해소, ③ 산재·체불 위험 보호 강화 등을 제시
- 한편, 정부(고용부, 산업부, 공정위)와 조선업계는 10. 19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개최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공동선언은 조선 5사가 하도급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협력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의 체결에 노력한다는 내용 포함

○ 경총은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은 우리 조선업이 그 동안의 부진을 벗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

■ 경총,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 추진의 문제점 지적

○ 경총은 10. 19「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가압류 제한의 문제점」토론회 개최

※ 주요 참석자

(좌장) 김상겸 동국대 교수

(발제) 이정 한국외대 교수, 성대규 강원대 교수

(토론) 김완수 울촌 변호사,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장, 황효정 고용부 과장, 황용연 경총 본부장

-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가압류를 금지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밝힘.

- 또한, 사용자·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한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 도급·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법률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발언

○ 한편, 경총은 10. 25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원청사업주 사용자성’을 주제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토론회 개최 예정

※ 일시 및 장소 : 10. 25 14:30 ~ 16:45,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요 참석자

(좌장) 이정 한국외대 교수

(발제자)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

(토론자) 김상민 태평양 변호사, 이현석 김앤장 변호사, 황효정 고용부 과장, 장정우 경총 본부장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양 노총, 추투(秋鬪) 준비 본격화

○ 한국노총은 10. 18「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11. 5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계획 논의

- 한국노총은 11. 5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한국노총은 ▲노동시장·공공부문 개악 저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최저임금 차별적용 논의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주장

[참고]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주요 요구사항

구분	주요 내용
반노동 정책 분쇄	▲ 노동시장·공공부문 개악 저지 ▲ 일방적 연금개악 저지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노동 민생·입법 쟁취	▲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 ▲ 공무원 차별개선 및 신분보장 ▲ 사업 이전 시 고용승계 의무화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 노조법 전면 개정

○ 민주노총은 11. 12 전국노동자대회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법 2·3조 개정(사용자성 확대, 쟁의행위 시 가압류·손해배상 제한)을 촉구한다는 방침

2. 법제 동향

■ 정춘숙 의원(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0.17)

- (발의 이유) 현행법(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항과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사항에 근로자의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도록 의무 부여

■ 이인영 의원(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0.17)

- (발의 이유) 현행법(상생협력법 제22조의2)상 수탁기업은 공급원가 변동시 위탁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①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의 인상 및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노무비의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변동할 경우, 위탁기업은 그 변동분을 반영해 약정서를 다시 발급하고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위탁거래 표준약정서를 마련
③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대상에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지급 등을 성실히 이행한 자'를 포함

■ 이인영 의원(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0.17)

- (발의 이유) 현행법(최저임금법 제6조)은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급계약 체결 후에

Ⅲ. 노사 및 법제동향

최저임금액이 상승해 다음 해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

■ 이인영 의원(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0.17)

- (발의 이유) 현행법(하도급법 제16조의2)상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 변동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①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의 인상 및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노무비의 상승으로 공급원가 변동 시 원사업자는 변동분을 반영해 서면을 다시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지급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등에게 사용을 권고